대응에 나서 5·18 왜곡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들과

연계해 1권 수정본과 3권 내용 중 왜곡·폄훼 부분을 취합하고 있다"며 "다만 3권은 법원 판결을 부

정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5월 단체보다는 법무부

한편,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으

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권은 지난 8월4일 법원으

로부터 유통·배포 등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권은 청와대 시절(1980~1988)을 다루고 있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6월항쟁 30주년 기념표석 제막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표석' 제막식이 17일 광주시 남구 향교 앞에서 진행된 가운데 지역 민주인사, 시민단체회원 등이 항쟁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뻔뻔한 '全'…회고록 제3권도 온통 왜곡

1988년부터 현재 다뤄···전체 644쪽 중 219쪽 5·18 재판 서술 "특별법은 위헌·나는 정치재판 희생자"···5·18재단 법적대응 강구

'전두환 회고록' 3권(황야에 서다)도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긴 것으 로 확인됐다. 1권(혼돈의 시대) 수정본이 여전히 5· 18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3권 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호도하는 내용이 적 지 않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두환 회고록' 3권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른 바 1997년 '5·18재판'을 주요 내용으로 기술했다. 재판 내용은 전체 644쪽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219쪽에 담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의 근거가 된 '5·18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자신을 김 영삼 정권의 정치재판 희생자로 표현하고 있다.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는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자위 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여 이른바 '발포 명령자'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375쪽)고 주 장하고 있다. 신군부 세력의 개입이나 조종은 없었 다는 것이다.

기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 제 출됐던 육군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지시 및 조치사항' 문건을 살펴보면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몇시간 전에 열렸던 국방부 회의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나온다. 이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이 논의됐었다.

전 대통령은 또 "광주 시위를 진압한 일이 대통령과 내각이라는 헌법기관을 외포(畏怖·몹시 두려움)케 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판결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457쪽)고 했다. 전 전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주요 작전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458쪽에 나온 내용은 5·18재판에 대한 전 전 대통령의 시각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는 "5·18재판은 참으로 공정하지도, 온당하지도 않고 괴상하다고나해야 할 기이한 재판이었다. 유리한 허위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다. 유무죄의 판단 기준은 너무도 자의적이었다"고 서술하고있다.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18재단 등 5월 단체들은 3권에 대해서도 법적

어린이 놀이용 핑거페인트서 유해물질

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피부발진 등 유발

어린이 놀이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핑거페인 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 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은 산도(pH)나 미생물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 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물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했더니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CMIT는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12~15mg/kg 검출돼

안전기준(10mg/kg 이하)을 넘었다.

조사대상 5개(25.0%)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 mg/kg 이하)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12~60mg/kg)의 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mg/kg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mg/kg)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 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 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CMIT·MIT는 현재 핑거페인트에 각각 10mg/kg 이하, 혼합물은 15mg/kg 이하만을 쓰게 돼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환경연합, 도시공원위원회 등 감사 청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광주시감 사위원회에 도시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16일 감사청구서를 통해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공원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동안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아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위원을 모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연임규정 등을 위 반했고,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 원회)가 소수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집중시키거 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을 위배한 채 자의적으 로 팀을 나눠 운영하면서 동일 위원에게 재심의 를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에 대한 위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에 민간업체 당사자들이 30% 이상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감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5·18 계엄군 기념비에 고교 '발칵'

기갑학교 창설비 세웠다 교사 반발·교육청 철거 요구···하루만에 없던일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 엄군으로 동원된 부대의 창설기념비를 세웠다가 내 부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철거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가 지난 11일 교내에 육군기계화학교(기갑학교) 창설기념비를 세웠다가 다음날 철거했다.

옛 전교사(전투병과교육사령부) 터에 자리한 이고교는 기갑학교 요청에 따라 부대 역사가 깃든 장소를 기념하는 비석을 건립했다.

건립 예산과 인력은 기갑학교가 제공했다. 비석은 약 1m 높이 사각기둥 모양으로 1953년 창설한부대 역사와 '선배 전우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문구를 담아 운동장 한편에 세워졌다.

기갑학교는 전교사 예하 다른 부대와 함께 $5\cdot18$ 당시 항쟁 진압에 동원됐다.

해당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광주에 연고를 둔 기갑학교가 탱크 투입 명령에는 반발했던 점 등 나름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석 건립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은 생략했고 교장 독단으로 기갑학 교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일부 교사 등이 반발하고 상황을 파악한 교육청도 철거를 제안하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고 기갑학교는 곧바로 비석을 거둬갔다.

들마고 마르기 다시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